

『지구화 시대의 정의-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낸시 프레이저)

5장 「공론장의 초국적화: 탈베스트팔렌적 세계에서 공론의 정당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발제

정리: 김연수

*비판 이론의 공론장 개념과 초국적 공론장의 간극

[1] 규범적 정당성

- “공론장은 의사소통적 생산공간으로 간주”
- “그 형성과정이 포용적이고 공정한 한에서, 공론은 비판적 검토를 견뎌낼 수 없는 관점들을 기각시키고 그러한 검토를 견뎌 낼 수 있는 관점들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이해”
- “무엇에 관하여 누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한 문제”

[2] 정치적 유효성

- “공론장은 공론을 정치적 힘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으로 간주”
- “시민사회의 숙고된 의견을 동원함으로써, 공론은 관료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며 국가의 행위가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하도록 보증한다고 가정”됨. “공론장은 주권과 관련”됨
- 비판: “‘초국적 공론장’ … 담론공간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참여자들이 정치적 삶에 대한 동등한 참여의 권리를 가진 정치공동체의 동료구성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137

고전적인 공론장 이론과 그에 대한 급진적 비판: 베스트팔렌적 틀의 주제화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의 여섯 가지 가정들

- [1] 공론장은 국민국가와 연관됨. 국가가 공론의 수신자
- [2] 공론장의 공중은 (암묵적으로) 국가의 시민. 토론의 목적은 시민들의 일반이익 확정
- [3] 토론의 주된 주제는 국민국가의 경제관계 조직
- [4] 전국 언론, 전국 방송과 같은 근대적 매체에 의한 의사소통을 통한 공중의 결합 140
- [5] 공유된 단일 언어 매체를 통한 공적 의사소통 암묵적으로 가정
- [6] 문화적 기원을 18~19세기 출판 자본주의 문학과 소설에서 찾음. 문학형태들이 국민[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발생시켰다고 봄 141

*하버마스에 대한 비판

- [1] 정당성 비판: 공중의 구성원으로서의 당사자 참여에 대한 체계적 장애물 은폐 143
 - [2] 유효성 비판: 공론의 정치적 힘 박탈하는 체계적 장애물 파악 못함 144
- 두 비판은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공간을 하버마스와 공유한다. 145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상호연관성” 강조(비판 수용)
- 사회운동 역할 인정
-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발언권 사이의 상호의존성” 인정(정당성 문제와 씨름)

- “법이 의사소통 권력을 행정권력으로 번역하는 적절한 수단”
- “‘공식적인’ 민주적 권력순환과 ‘비공식적인’ 비민주적 권력순환을 구별”
 - [1] 공식적 권력순환: “약한 공중이 강한 공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시 강한 공중은 행정적 국가기구들을 통제” 148
 - [2] 비공식적 권력순환: “사적인 사회권력들과 공고한 관료적인 이해관계들이 입법자들을 통제하고 공론을 조작”(통상적으로 지배적이라는 것을 인정)(유효성 비판 수용) 149

하지만 여전히 공론장과 관련한 “모든 논쟁 참여자들이 공론장과 영토국가를 연관시켜 왔다.” 150

탈국민적 상황: 베스트팔렌적 틀에 대한 문제제기

*초국적 공론장에 대한 두 견해

- [1] 초국적 공론장은 20세기 후반의 지구화와 결합된 새로운 발전
 - “정치적 공간의 패권적 분할을 정확하게 포착”
- [2] 17세기 국가 간 체제 탄생 이후 계속 초국적
 - “메트로폴리탄 민주주의가 식민지 정복과 함께 발생하였으며, 식민지 정복이 공론의 초국적 유통을 활성화시켰다는 사실” 알려줌
 - 프레이저의 종합 → “초국적 공론장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공론장의 구조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151

*공론장의 초국적/탈국민국가적 변화 162

	과거	현재
의사소통의 당사자	“국가의 시민”	“시민으로 구성되지 않는 일련의 분산된 대화 참여자들”
의사소통의 내용	“국가의 경제에 근거한 국가의 이익”	“지구 전체의 경제”, “초국적인 위험공동체”
의사소통의 장소	“국가의 영토”	탈영토화된 사이버 공간
의사소통의 방법	“국가의 출판매체”	“분산적이고 중첩적인 시각문화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초언어적 관계망을 포괄”
의사소통의 수신자	주권 가진 국가	“손쉽게 인식할 수도 없고 책임을 부여할 수도 없는 공적이고 사적인 초국적 권력들의 무정형한 혼합물”

공론장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사유하기

“규범적 정당성과 정치적 유효성 … 두 측면은 그것이 처한 사회역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비

판적인 모든 공론 개념에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다.” 163

*정당성 문제

- 공론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정당한 것으로 간주
- 공론의 정당성은 “포용성의 정도”와 “동등한 참여를 실현하는 정도”가 중요

[1] 포용성 조건

- 공적 토론 참여 승인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와 관련
- “토론은 원칙적으로 결과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만 한다.”

[2] 동등성 조건

-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가의 문제
- 모든 대화 참여자가 진술하고, 문제 설정하고, 명시적 가정을 문제 삼고, 논의를 바꾸고, 공정하게 청취하는 데서 대체로 평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164
- 베스트팔렌적 틀에서는 “포용성 조건과 동등성 조건은 제한된 공동체에서의 공유된 시민권이라는 이상 속에서 결합”됨 → 시민권이 “정당한 공론의 ‘당사자’와 ‘방법’ 모두에 관한 모델이 됨
- 결과: 정당성 관한 토론 차단. 정당성의 ‘방법’에 주목하면서 ‘당사자’ 관련 배제 165
- 해결의 단서: 포용성 개념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 원칙’과 연결됨. “정치적 결정들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비공식적 의견형성 과정들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그러나 지구화 된 오늘날 시민권이 모든 당사자 대리할 수는 없음 166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 대안

- “일련의 사람들을 동료 구성원 공중으로 만드는 것은 공유된 시민권이나 인과적 관계 속에서의 뒤얽힘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한 근본규칙들을 설정하는 협치구조에 그들이 함께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67
-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관련된 공중의 범위는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협치구조의 범위에 상응해야만 한다. 그러한 협치구조들이 국가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론장들 역시 초국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 포용성 조건의 정치적 시민권과의 자동적 동일시를 넘어 종속된 모든 사람들로의 확장: “공론은 정치적 시민권과는 무관하게 관련된 협치구조에 공동으로 종속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것인 경우에만 정당할 수 있다.” 168

*공론의 정치적 유효성 문제

- “공론장 이론에서 공론은 공적 권력의 행사가 시민사회의 숙고된 의지를 반영하도록 만들고, 공적 권력에 책임을 부과하는 정치적 힘으로 동원되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1] 번역 조건

-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의사소통 권력은 먼저 구속력 있는 법률로, 다음으로는 행정권력으로 번역되어야만 한다.” 168
- “시민사회로부터 제도화된 공적 구너력으로 나아가는 의사소통 권력의 흐름과 관련”

[2] 능력 조건

- “공적 권력은 그것이 응답해야만 하는 의지, 즉 토론을 통해서 형성된 의지를 실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 토론 통해 형성된 의지의 “공적인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권력의 능력과 관련”
- 베스트팔렌적 틀의 관점에서 “주권을 가진 영토국가라는 개념과 연결”된 결과: 유효성 관련 토론의 차단. “번역 조건에 대한 관심을 촉진”했지만 “능력 조건을 은폐하는 경향” 발생 169
- 도전의 두 가지 방향
 - [1] “새로운 초국적인 공적 권력들을 창출”
 - [2] “그것들을 새로운 초국적인 공론장에 복속시켜야” 함 171